

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

- 혁신과 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-

2018. 2. 27



국무조정실

순서

I. '17년 규제혁신 성과 및 평가	1
II. '18년 규제혁신 방향 및 계획	
1. 추진 방향	3
2. 추진 계획	
① 미래新산업 규제혁신	4
②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	6
③ 국민불편·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	7
④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	9
III. '18년 규제혁신 중점 추진 과제	10
[부처 제출 과제 중심]	

I. '17년 규제혁신 성과 및 평가

1] 새 정부 규제혁신 재설계

-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'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' 포함
-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* 확정('17.9.7)

- ▶ (미래 新산업 지원) 신산업·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
 - 기존 규제방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, 신제품·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
- ▶ (일자리 창출)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집중 혁신
 -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현장 규제애로 해소, 서비스산업·경쟁제한적 규제 등 일자리 관련 규제 적극 혁신
- ▶ (민생불편·부담 해소)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적극 혁신
 - 국민생활 불편 해소, 지역발전·분권을 위한 규제정비
 - 중소기업·소상공인 규제차등화 추진, 생명·안전·환경규제 관리 강화

⇒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

2]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 주요성과

- ① 신산업의 경우 '우선허용-사후규제'로 규제설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,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추진
 - (포괄적 네거티브 전환) 포괄적 네거티브 입법방식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1차 전환과제로 38건* 발굴·혁파 추진
 - * △포괄적 개념정의(7건) △유연한 분류체계(13건) △네거티브 리스트(10건)
 - △사후평가·관리(3건) △규제 샌드박스(5건)
 - (선도사업 규제혁신)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검토·추진 착수
 - (현장제기 규제애로 해소)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담회·현장방문 등 현장소통*을 통해 발굴된 애로 89건 해소 추진
 - * 업계·전문가 간담회(15회), 현장방문(11회), 업무협의(6회)

②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민 불편 해소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혁신에 역량 집중

- (행정조사 정비) 국민 불편·부담 경감을 위해 최초로 행정조사 전수점검(17.5~8월, 27개부처 608건)을 실시하여 **175건***(중복 17건 제외) 정비

* △ 불요불급한 조사 폐지·축소(26건) △ 조사 간소화 및 조사방식 혁신(42건)
△ 조사근거·요건·절차 구체화(124건)

- (지역발전 규제정비) 낙후지역 재생 등 지역발전·주민편의 개선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건의 **145건 중 47건*** 규제정비

* △폐교 활용 야영장 설치시 보조금 등 지원 허용 △부산항내 유선운항 허용 등

- (경쟁제한적 규제혁신) 국민생활 밀접 및 중소기업 부담 경감 분야를 중심으로 발굴한 과제 **39건 중 25건*** 규제효과

* △중소 맥주 제조·유통 규제 완화 △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폐지 등

③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·반영하고,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소통 강화

- (수요자 중심 과제발굴) 총리 주재 ‘규제효과를 위한 현장대화’(17.9, 11월)를 개최하고, 찾아가는 간담회·현장방문(46회) 추진

- (국민소통 강화)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민생애로 해소, 새 정부 출범 이후 1,159건 규제건의 접수·처리

④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·제도 정비 및 근거 마련 추진

- (법령개정 추진) 규제차등화, 생명·안전·환경 규제 폐지·완화시 규제심사 등을 포함한 「행정규제기본법」 개정안 국회제출(17.12)

- (규제 샌드박스)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1+4개 입법* 검토·추진

* 행정규제기본법 개정(규제특례 원칙), 분야별(ICT융합·핀테크·산업융합·지역특구)

◇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에 중점 (법·제도적 접근) + 각 부처별 과제 발굴·효과 병행(사례별 접근)

◇ 감사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으로 현장 실행력 제고

⇒ 지난해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시점, 범정부 차원에서 ‘속도감’ 있게, ‘체감’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

Ⅱ. '18년 규제혁신 방향 및 계획

1. 추진 방향

목 표

혁신과 민생을 위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으로
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· 확산

추진 전략

- ◆ (미래新산업 지원) 법·제도 정비 및 혁신성장 선도사업 역점 추진
- ◆ (일자리 창출) 일자리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서비스·경쟁제한 규제혁신
- ◆ (국민불편·부담 해소) 민생불편 해소 및 중·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한 규제혁신

주요 추진 과제

1	2	3
'미래新산업' 규제혁신	'일자리 창출' 저해 규제혁신	'국민불편 · 민생부담' 야기 규제혁신
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<small>(우선허용-사후규제)</small>	현장 중심 일자리 규제 혁신	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분권 제고 규제혁신
신산업 선도사업 규제혁신	주요 분야별 일자리 산업 육성 <small>(서비스산업 및 경쟁제한적 규제혁신 등)</small>	중소기업·소상공인 부담 완화
4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		

2. 추진 계획

1 미래新산업 규제혁신

1-1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

① 법·제도 정비 및 확산

- **(신산업 규제특례 법령정비)**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* 상반기중 입법 마무리
 - * △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 △규제신속확인 의무 △규제법령정비 의무 등
 - 중앙부처(법령)에 이어 공공기관(규정·지침)까지 신산업 분야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·확산
 - * '17년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하여 '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'을 보완·배포(2월)
 -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를 금년중 도입
 - * 산업부·과기부·중기부 등 신산업 핵심부처는 상반기 중 도입 추진
 - 신설·강화되는 규제가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
 - * 신설·강화 규제의 신산업 영향분석 매뉴얼 마련 및 추진(3월)
- **(규제 샌드박스 제도정착)** 4대 분야별 '규제 샌드박스 관련법'* 상반기중 입법 마무리
 - * ICT융합법, 금융혁신지원법, 산업융합촉진법, 지역특구법
 - 분야별 4개법 外 추가 규제샌드박스 입법과제 발굴추진(연중)
 - 금년중 시범사업을 폭넓게 발굴 추진하되, 가급적 상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
 - * 부처별 업계·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범사업 추진

1-2. 신산업 선도사업 규제혁신

① 선제적 발굴 혁신

- 혁신성장 선도사업*의 핵심규제를 지속 발굴·효과**하고 성공사례를 他분야·사업으로 확산

* △초연결지능화(과기부) △핀테크(금융위) △에너지신산업(산업부) △스마트시티(국토부) △드론(국토부) △자율주행차(국토부) △스마트공장(중기부) △스마트팜(농림부) 등

** 관련 전문가, 연구기관 등 대상 간담회·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과제 발굴(3월)

- 규제혁신 토론회(1월)시 보고된 1차 효과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,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

- 신산업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효과

⇒ 국조실 주관 '규제혁신점검회의' 운영하여 추진상황 점검

-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

- 신산업 선도사업은 향후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요 규제이슈를 폭넓게 발굴, 큰 틀에서 단계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

-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

* (예) △제조사와 운전자간 사고책임 분배 △위치정보 등 수집시 사전 동의 문제 등

** 연구소간 협업연구중(과학기술정책연(주관), 법제연, 자동차안전연, 자동차부품연)

⇒ '자율주행차' 분야를 시작으로 드론·맞춤형 헬스케어 등 타 분야 확산

② 현장 제기 규제혁신

- 신산업 관련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해소(상·하반기 나누어 추진)

- 신산업 5대 분야(△무인아동차 △ICT △바이오헬스 △에너지·신소재 △신서비스) 중심

-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*를 중심으로 건의자·부처와 함께 심층 토의

*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, 민간전문가 120명 → 기업가, 연구원 보강 등 전문성 강화(3월)

2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

2-1. 현장 중심 일자리 규제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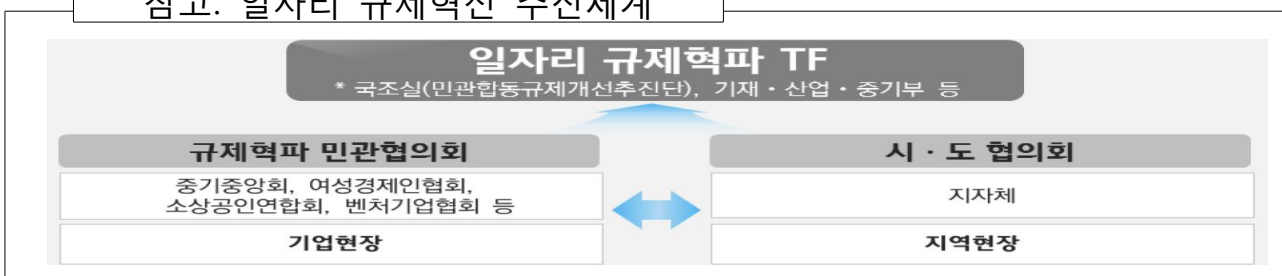
1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집중 지원

-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**일자리 창출 프로젝트***를 전방위적으로 발굴, 강력한 규제혁신을 통한 현장 애로 해소
 - * 일자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발굴·추진
 - 정부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, 중소·중견기업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우선 해결
 - * 현장 탐방,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과제 발굴(~6월) 및 협의·조정(~8월)
 -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현장 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·효과
 - 중소벤처·지자체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건의사항 상시 접수 및 개별기업 현장방문 등 동시 추진
 -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의 규제혁신 우선 추진
- ⇒ **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및 현장애로(上·下半年기 1회) 규제혁신 방안 추진**

2 규제혁신 체계 구축

- 상시 일자리 규제 발굴·혁신을 위한 **범정부 협의체 가동**(2월~, 분기별)
 - 「**일자리 규제혁신 TF***(정부)」를 구성하고 ‘규제혁신 민관협의회(경제단체 등)’와 ‘시·도협의회(지자체)’ 등 **협력체계** 운영(2월~)
 - * 국무조정실, 기재·산업·중기부 등 관계부처 참여, 일자리위원회와 긴밀 협조

참고: 일자리 규제혁신 추진체계



2-2. 주요 분야별 일자리 산업 육성

1 서비스산업 규제혁신

○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발굴·혁파를 통해 신성장·유망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

- △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△핀테크·콘텐츠 등 지식집약형 서비스 △음식·숙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우선 혁신

⇒ 신유형·지식집약형,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(上·下半年기 1회)

2 경쟁제한적 규제혁신

○ 혁신시장 신규진입과 사업자 영업방식 등을 제한하는 규제 발굴·혁신

* 관련단체 건의·연구용역 등 과제발굴 → 관계부처간 협의·국조실 조정

- (신산업) IoT 장비 시장 진입제한,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구역 제한 등

- (서비스업) 물류·교육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 테마별 과제 발굴·혁파

⇒ 혁신시장 및 서비스업 분야 경쟁제한규제 혁신방안 발표(上·下半年기 1회)

3 국민불편·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

3-1.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분권 제고 규제혁신

1 국민생활 불편 규제혁신

○ 국민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 점검·정비

- 지역·지구내 입지·행위제한 및 업종별 영업행위 기준 개선*, 전자상거래·금융·민원절차 등 비대면·온라인 전자문서 활성화**

* 자연휴양림내 반려동물 입장 허용 등 **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 등

- 방치되고 있는 유휴 부지 활용방안 검토*, 문화체험·장기체류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확충**

* 공익목적 이용시 부지 무상사용 허용 등 ** 관광사업 분류체계 개선 등

⇒ △주민·이용객 불편 영업규제(3월) △온라인 거래·활용 저해규제(6월) △개인·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(9월) △관광·숙박 불편규제(12월) 혁신방안 발표

② 지역발전·자치분권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

○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

- 취업·창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,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·혁파

○ 규제권한 지방 이양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

- 지자체 이양 건의사항(최근 3년간 1만여건)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삶 밀접 분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

* 지방이양 과제 선정(상반기) → 과제별 이양계획 수립·추진(하반기)

(사례) △ 하천수 사용승인 권한 이양(국토부장관→시·도지사)
△ 지역특화발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권(중기부장관) 생략

- 중앙정부 법령사항의 조례·규칙 위임범위 확대

(사례) △ 지자체장이 어린이놀이시설 내 음주·흡연 등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△ 산촌개발계획 수립내용의 범위 지정(부령→조례)

⇒ 지역 일자리(상반기) 및 신산업 분야(하반기) 규제혁신 방안, 자치권 확대를 위한 중앙법령 정비방안 발표(4월)

3-2. 중소기업·소상공인 부담 완화

①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차등화 추진

- 규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차등화 검토 의무화를 추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

- '규제영향분석(부처)→ 중기영향평가(중기부)→ 규제심사(규개위)' 3단계에 걸쳐 검토하도록 관련 체계 개편

⇒ 시범사업 및 매뉴얼 마련(~7월) → 규제 차등화 전면 실시(하반기)

② 중소기업·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혁신

-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영업규제, 부담금·수수료, 인증 관련 시험·검사제도 혁신 등 추진

⇒ 중소기업·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(상·하반기 1회)

4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

4-1. 합리적인 규제심사 품질 제고

① 생명·안전·환경 관련 규제관리 강화

- 생명·안전·환경 분야의 경우 꼭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폐지·완화시에도 규제의 필요성·적정성 심사
 - 심사대상 및 기준 명확화, 규제심사 법적근거 조속 입법화 추진
- ⇒ 매뉴얼 정비 및 부처 교육(~5월) → 규제심사 전면 실시(下半年)

② 사회적 비용·편익 분석 강화

- 피규제집단의 직접비용·편익 뿐만 아니라 기업·국민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사회적 비용·편익 분석 강화
- ⇒ 가이드라인 마련(3월) → 부처 교육 및 심사 적용(4월~)

4-2. 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

① 성공적 규제혁신을 위한 감사제도·운영 개선 추진 (감사원)

-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객관성을 높여 제도의 신뢰성 확보
 - * 전담조직(적극행정지원단)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委 설치
- 신산업 등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 자체대상*으로 선정
 - * 무인이동체·ICT융합 등 5개 분야(세부 13개) 선정('18.2.20)
- 정부와 감사원간 소통 강화를 위한 (가칭)「감사운영협의회」 구성 추진

② 적극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 지원 방안 마련·추진 (각 부처)

- 적극적인 규제혁신 유도를 위한 자체감사 제도 운영
 - * 적극행정 면책 또는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
 - 인센티브 강화 및 조직혁신 방안 강구
 - *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공·승진우대 등
- ⇒ 국조실 중심 이행상황 점검 → 규제혁신 평가에 추진성과 반영

Ⅲ. '18년 규제혁신 중점 추진 과제 (부처 제출 과제 중심)

1. 개요

◆ '18년 규제혁신 30대 핵심과제 선정,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

① 규제혁신 과제 선정(400개 세부과제 → 연중 추가과제 발굴)

- '18년 규제정비지침* 시달(17.12.26) → 36개 부처 490개 과제 제출('18.1월)
→ 국조실 검토·조정**을 거쳐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('18.2월)

- * 정비지침 주요내용 : 미래신산업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고 규제정비과제 발굴
 - ① 미래신산업 : 규제샌드박스 도입,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, 규제신속확인 등
 - ② 일자리 창출 : 중소기업 규제해소, 서비스산업 규제혁신, 경쟁제한 규제혁신 등
 - ③ 국민불편·민생부담 경감 : 국민생활 불편·부담 해소, 지역발전 규제혁신 등
 - ④ 기타 : 부처별 소관 국정과제, 업무계획 등을 고려 중점과제 발굴

** 부처제출 과제중 비규제 사항 제외, 신산업 과제 추가 등 90여건 보완·조정

○ 30대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확정

- 규제혁신 3대 분야*의 중점 추진과제로 30대 핵심과제 확정

* △미래新산업 △일자리 창출 △민생불편·부담 분야 규제혁신

- 부처과제(400개) 중 333개*를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로 분류

* 핵심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67개 과제는 기타 부처과제로 분류

- 각 과제는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완료시한을 최대한 단축

* 상반기 내로 하위법령 정비필요과제(305개 세부과제, 76%)는 입법완료, 법률 제·개정 과제(95개 세부과제, 24%)는 국회제출(연내 입법완료) 추진

② 과제 관리방안(각 부처 책임관리 → 국조실 점검·평가)

- 400개 외에 연중 세부과제 추가 발굴 지속 및 이행점검 추진

- 세부과제는 각 부처 책임하에 조기 이행 추진

→ 국조실에서 수시·분기별 점검

- 주요성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 질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며 연말 이행성과는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

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

'미래新산업' 규제혁신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| ⑥ 핀테크 활성화 혁신 |
| ② 규제 샌드박스 도입 | ⑦ 에너지 신산업 혁신 |
| ③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| ⑧ 무인이동체 혁신 |
| ④ R&D 및 인력관리 효율화 | ⑨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 |
| ⑤ 초연결 지능화 혁신 | ⑩ 기타 분야별 규제혁신 |

'일자리 창출' 저해 규제혁신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① 창업 저해 규제 혁신 | ⑥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|
| ② 벤처기업 등 투자활성화 | ⑦ 물류산업 진입·진출 완화 |
| ③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합리화 | ⑧ 레저 및 관광 활성화 |
| ④ 공공부문 민간 참여 확대 | ⑨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|
| ⑤ 공공조달 및 계약 요건 혁신 | ⑩ 불합리한 자격 제한 혁신 |

'국민불편·민생부담' 야기 규제혁신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① 주민 불편 입지규제 혁신 | ⑥ 국민 주거·생활 불편 해소 |
| ② 사회적약자 불편·부담 해소 | ⑦ 불합리한 영업규제 완화 |
| ③ 출입국·수출입 절차 간소화 | ⑧ 중기·소상공인 차등규제 확대 |
| ④ 온라인 행정업무 확산 | ⑨ 인증·시험·검사제도 합리화 |
| ⑤ 민원 서식·절차 등 간소화 | ⑩ 부담금·수수료 제도혁신 |

2. 세부과제 주요내용 (예시)

미래신산업 규제 혁신

[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]

□ 항공기 분류체계 유연화 (국토부)

- **현행** 플라잉보드, 유인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는 항공기 분류체계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·시험이 곤란
 - 국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가 개발되어도 적용법령이 없어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부재
- **개선**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혁신 카테고리 신설로 항공기 분류체계 유연화 → 새로운 비행장치 개발 활성화
 - ☞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(고시) 개정('18.12월)

□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 네거티브 전환 (중기부)

- **현행** 벤처투자 금지업종을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 열거적 규정
 -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날 경우, 투자금지 업종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여 신산업 투자에 빠르게 대응 곤란
 - * 예) 핀테크 업종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
- **개선** 도박 등 사행성 업종·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·분야에 대한 투자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
 - ☞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('18.6월)

[규제 샌드박스 도입]

□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(과기정통부)

- **현행** 신기술·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연구개발특구* 기반 규제특례 부재
 - * 대덕('05), 광주('11), 대구('11), 부산('12), 전북('15) 등 5개 연구개발특구 지정·운영 중
- **개선** 특구내 신기술·신제품 규제특례(규제확인→안전성검증(↔시범사업)) 마련
 - ☞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제출('18.6월)

[규제신속확인제 도입]

□ 방송통신분야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(방통위)

- **현행**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규제 여부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대해 확인해주는 별도 소통창구 및 규정 부재
- **개선**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 등 필요여부에 대한 신속확인제도 운영
 - ☞ 방송통신 규제 신속확인 처리지침(훈령) 신설('18.6월)

[R&D 효율화]

□ 창업기업의 신기술·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(기재부)

- **현행** 창업기업이 R&D사업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
 - 창업기업 등 신제품 구매시 수의계약은 중기부 R&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허용하여 구매확산 효과 미흡
- **개선** 모든 국가 R&D에 대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허용
 - ☞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('18.9월)

□ 연구개발기업 조달시장 참여 확대 (중기부)

- **현행**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대상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
 - R&D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, 설비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애로
- **개선**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 등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의무를 면제
 - ☞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('18.6월)

□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(특허청)

- **현행**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미포함
- **개선**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
 - ☞ 특허법 시행령 개정('18.5월)

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

[창업 촉진 환경 조성]

□ 창업지원업종 및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 (중기부)

- **현행** 음식점업 등 과밀업종과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을 창업지원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, 동일업종 재창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
- **개선** 사회통념상 인정이 어려운 업종으로 제외 업종을 최소화하고,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
 - 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('18.6월), 시행령 개정('18.12월)

[벤처 투자 활성화]

□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출자비율 완화 (교육부)

- **현행**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20% 이상 확보해야 자회사 보유 가능
- **개선**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10%이상으로 완화
 - ☞ 산학협력법 개정안 국회제출('18.9월)

[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]

□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확대 (문체부)

- **현행** 제작지원 사업완료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15 한도(중소기업 5%)로 매출의 10%(중소기업 5%)를 기술료로 징수
 -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1인 이상 정규직 채용시 징수금액의 10% 공제
- **개선** 기업 구분없이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확대(공제비율 10%→50%)
 - ☞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('18.7월)

[물류산업 경쟁력 제고]

□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확대 (국토부)

- **현행** 사업용 화물차 허가는 수급조절제도가 적용되어 '04년 이후 신규허가 사실상 동결
 - 전기·수소차 등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도 어려운 상황
- **개선** 친환경 화물차(전기·수소차)의 경우 화물차 수급조절 적용을 배제하고 신규허가 허용
 - ☞ 화물자동차법 개정('18.6월)

[레저 및 관광 활성화]

□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(산림청)

- **현행** 산림내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*에서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레포츠 시설은 제외
 - * 산악승마, 산악자전거, 행글라이딩, 산악스키, 산악마라톤 등
 - 최근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사업 추진 애로
- **개선**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 추가
 - ☞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('18.12월)

[업종별 진입규제 완화]

□ 사회적기업 진입 장벽 완화 (고용부)

- **현행**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,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 5가지 유형이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육성 어려움
- **개선**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형별 인증 요건 완화* 및 절차 개선
 - * 사회서비스 범위 확대,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유연화 등
 - ☞ 사회적기업 인정·지정 지침(고시) 개정('18.12월)

국민불편·부담 규제혁신

[국민생활 불편 해소]

□ 설·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·발매 도입 등 철도 서비스 개선 (국토부)

- **현행** 코레일·SR(수서고속철)의 명절 승차권 예매는 PC로만 가능하고 모바일 예매 불가, SR 전화 예·발매가 불가하여 노약자·장애인 등 이용 불편
- **개선** 명절 승차권 모바일 웹 예매 시스템 구축, SR 전화 예·발매가 가능하도록 개선
 - ☞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를 위해 시스템 개선('18.8월), SR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화 예·발매 서비스 개시('18.3월)

□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(산림청)

- **현행** 국립자연휴양림시설내 반려동물(장애인 보조견 제외) 동반 입장 금지
- **개선**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·운영
 - ☞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(훈령) 개정('18.6월)

□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규제 개선 (교육부)

- **현행** 일반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의 편입학이 가능하나 전문대학은 불가
- **개선**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규정을 완화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허용
 - ☞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('18.12월)

[사회적약자 불편·부담 해소]

□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확대 (고용부)

- **현행** 주 2일 이하 및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수급요건* 충족 불가
 - *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
- **개선**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 요건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요건 완화
 - ☞ 고용보험법 국회제출('18.4월)

[중기·소상공인 차등규제 확대]

□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기상환 불이익 폐지 및 교육서비스업 지원 포함 (중기부)

- **현행**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달리 조기상환시 일정 기간 용자제한, 교육서비스업 지원 대상 미포함
- **개선** 조기 상환 불이익 부과 폐지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교육서비스업 포함
 - ☞ 중소기업정책 자금 용자계획 공고('18.1월)

[민원 서식·절차 간소화]

□ 화장품 폐업신고 등 절차 개선 (식약처)

- **현행**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폐업 신고시 식약처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서 제출, 의료기기 영업자 휴업 이후 영업 재개시 수리까지 3~7일 소요
- **개선** 식약처 또는 세무서 중 1곳에만 제출하면 영업 및 사업자등록 동시 폐업처리 가능, 의료기기 영업자 휴업 이후 영업 재개시 즉시 수리 가능
 - ☞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,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('18.12월)